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청신호 ▶5
운전중 DMB 시청 내달부터 단속한다는데… ▶7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 데이'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662호 1판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음력 12월 22일)

AI 확진 부안 농가 오리 나주서 도축

함께 도축된 8000여마리 유통…전남도 회수 나서

전북 발병농가 4곳으로 늘어…감염 신고도 잇따라

나주의 한 도축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부안 농가의 오리가 도축됐고, 이 과정에 쓰인 차량이 나주·영암 등지의 오리 농장을 드나든 것으로 밝혀져 AI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전북 농장에서 가져 온 오리와 함께 도축된 나주·함평 농장의 오리 8200마리가 시중에 유통돼 전남도가 회수에 나섰다. 〈관련기사 2면〉

전남과 인접한 정읍의 한 농장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AI 확진 농가도 4곳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21일 "나주시 S도축장에서 지난 17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부안군 한 농가의 오리 6240마리가 도축된 사실이 확인돼 이날 함께 도축한 나주·함평에서 가져온 오리 등 1만9000여마리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부안 오리 농가가 지난 20일 밤 10시께 AI 확진 판정을 받자 21일 이 도축장에서 잡은 오리를 회수하고, 도축장을 폐쇄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부안에서 반입된 오리는 이날 나주 등 지역 내 오리와 뒤섞여져 도축됐고, 이 중 전남에서 들여온 오리 8200여 마리가 유통됐다. 전남도는 "부안의 오리는 도축만 됐고, 현재까지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또 오리를 운반한 차량과 관계자가 나주와 영암, 함평, 영광 등 4개 시·군 16개 농가를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농장 관계자와 차량 등을 14일간 이동제한하고 AI 감염여부 등을 긴급 역추적하고 있다.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오리농장도 4곳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부안 일대에서 AI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 5곳을 확인했고, 한 곳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4농가도 AI에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I 감염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전북 정읍 고부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왔다. 방역 전문가들은 AI가 고창·부안 지역을 벗어나 전방위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부안 농가의 오리가 나주의 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사실이 확인된 21일 폐쇄된 해당 도축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축과정에서 오리가 뒤섞임에 따라 도축된 1만9700여마리 전량을 폐기했다. /나주=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림저수지 가창오리 13만마리 어디로?

AI 주범, 일시에 사라져 방역당국 긴장

전남도 영암호·고천암호 등 순찰 강화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가창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철새의 이동 경로 파악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떼가 한꺼번에 사라져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군산철새조망대는 "21일 오전 동림저수지 가창오리떼 13만마리 대부분이 저수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금강유역에 5만마리에 불과했던 철새가 20일 20만마리로 급격하게 늘어나자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떼가 군산 금강호로 온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다시 확인한 결과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떼는 소폭 줄었을 뿐 13만마리 대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호에 늘어난 가창오리떼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1일 오전 다시 철새 개체 수 파악에 나선 군산철새조망대는 동림저수지에 있던 가창오리떼가 사라지고, 금강호의 철새 개체 수는 전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떼 13만마리가 하루 새 한꺼번에 떠나 종적을 감춘 것이다. 이날 눈이 내려 철새의 먹이인 낙곡(落穀·들판에 떨어진 곡식)이 보이지 않아 철새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비상이 걸렸다. 영암호, 금호호, 고천암호 등 가창오리 주요 도래지가 많아 이들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1만마리의 가창오리가 있는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상 한 번 북상한 철새가 다시 남쪽으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추가 가창오리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안철수 "3월 신당 창당"

내달 창당준비위 발족…지방선거 3자 구도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윤여준 의장은 21일 오는 3월 신당을 창당해 6·4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이를 위해 내달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안 의원 측은 또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혀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간 3자 구도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호남에서는 야권 맹주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제주 벤처마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정치에서 국민 삶이 사라지고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 낡은 틀로는 더 아무 것도 담아낼 수 없고 새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하고 창당의 결심을 말씀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이념과 지형을 볼모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정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제3세력 출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세력은 존중의 대상이지 증오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다. 힘을 합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시대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민통합'을 강조한 뒤 "새로운 정당은 극단주의나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정치공간으로 기득권 정치세력이 외면한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새 정당은 한국정치 수십 년 병폐를 뿌리뽑고 대변화를 기필코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구조를 생산적 경쟁구조로 바꾸는 게 목표"라며 "선거용 정당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여준 의장은 이어 '2월 창당준비위 발족-3월 내 창당' 일정을 밝힌 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를 다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카드 3社 115만명 재발급·해지

정부, 과징금 부과 등 정보유출 방지대책 오늘 발표

사상 최대의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고객들은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은행·카드사 창구로 몰려가 카드 사용정지 및 재발급 신청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이 날 카드사에 재발급이나 해지를 요청한 고객은 총 115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정식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위스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금융당국도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 중에 제재심의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도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는 '2차 피해'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 전국 63개 검찰청에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